

※ 세제발전심의회에서 변경 가능성이 있으니 최종 확인 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보도자료3

이 자료는 2024년 7월 25일(목) 16:00부터  
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 2024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

2024. 7. 25.

기 획 재 정 부



# 목 차

## I . 경제의 역동성 지원

### 1. 투자·고용·지역발전 촉진

(1) 중견기업 범위 조정 .....	1
① 현행 조특법상 중견기업의 범위 .....	1
②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.....	1
(2)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.....	2
① 현행 제도 .....	2
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.....	2
③ 적용시점 .....	2
(3) R&D,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.....	3
①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.....	3
② 점감구조 적용 시기 .....	3
③ 코스닥상장 중견기업에 대한 우대 공제율을 폐지하는 이유는? .....	3
(4) R&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(인건비) .....	4
①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.....	4
(5)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.....	5
① 현행 제도 .....	5
② 개정 취지 .....	6
③ 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 예시 .....	7
(6)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지원요건 완화 .....	8
① 해외자원 개발을 위한 광업권·조광권 취득 방법 .....	8
②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.....	8

### 2. 기업경쟁력 제고

(1) 가업상속·승계 제도 개선 .....	9
① 현행 제도 .....	9
② 가업상속공제 확대 취지 .....	9

(2)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.....	10
① 현행 제도 .....	10
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.....	10
(3)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.....	11
① 현행 제도 .....	11
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.....	11
(4)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특례 신설 .....	12
①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개요 .....	12
②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.....	12
(5) 자기주식 관련 적격인적분할 요건 합리화 .....	13
① 현행 제도 .....	13
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.....	13

### 3. 자본시장 활성화

(1)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.....	14
① 개정 취지 .....	14
② 개정 내용(법인세 세액공제) .....	15
③ 법인세 세액공제 계산사례 .....	15
④ 개정 내용(배당소득 분리과세) .....	16
⑤ 배당소득 분리과세 계산사례 .....	17
⑥ 주주환원 촉진세제와 배당소득증대세제의 차이점 .....	18
(2)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 세제지원 확대 .....	19
① 개정 취지 .....	19
② 국내투자형 ISA에서 국내주식형 펀드의 개념 .....	19
③ 국내투자형 ISA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가입을 허용하는 이유 .....	19
(3)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분류 규정 마련 .....	20
①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.....	20
② 조각투자상품에 해당하는 증권외의 구체적 범위 .....	20
③ 배당소득 과세시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하는 것 아닌지? .....	20
(4) 펀드(집합투자기구)이익 계산방법 합리화 .....	21
① 현행 펀드 과세체계 및 개정 내용 .....	21
② 시행시기 .....	21

## Ⅱ. 민생경제 회복

### 1. 결혼·출산·양육 지원

(1) 결혼세액공제 신설 .....	22
① 개정 취지 .....	22
② 적용 시기 .....	22
③ 적용 사례 .....	22
(2)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.....	23
① 개정 취지 .....	23
② 현재 출산·양육수당과 구분 .....	23
③ 적용 특례 .....	23
④ 특수관계자에 대해 비과세 제한 이유 .....	24
⑤ 세부담 완화 사례 .....	24
(3)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.....	25
①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.....	25
② 기대 효과 .....	25

### 2. 서민·중산층 부담 경감

(1) 수영장·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 .....	26
① 현행 제도 .....	26
②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.....	27
(2) 근로장려금(EITC) 맞벌이가구의 소득상한금액 인상 .....	28
① 근로장려금(EITC) 개요 .....	28
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.....	29
③ 개정 효과 .....	29
(3) 채용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.....	30
① 현행 제도 .....	30
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.....	30
(4)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.....	31
①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.....	31
② 하이브리드차의 감면한도를 축소 한 이유는? .....	31

### 3. 소상공인·중소기업 지원

(1) 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 분할 과세특례 신설 .....	32
① 현행 제도 .....	32
② 개정 취지 .....	32
③ 적용 사례 .....	33
(2) 주류 관련 제도 개선 .....	34
① 탁주의 첨가원료를 확대(향료·색소 추가)한 이유는? .....	34

### Ⅲ. 조세체계 합리화

#### 1.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

(1-1) 상속·증여세율 및 과표 조정 .....	35
① 현행 상속·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율 .....	35
② 개정 취지 .....	35
(1-2)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상향 .....	36
① 상속세 인적공제 개요 .....	36
② 개정 취지 .....	36
(2) 가상자산 과세 유예 .....	37
① 가상자산 과세 유예 이유 .....	37
(3)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 .....	38
① 개정 취지 .....	38
② 시가의 판단기준 .....	38
③ 할인금액 적용 사례 .....	38
(4)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기준 합리화 .....	39
① 현행 제도 .....	39
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.....	39

#### 2. 비과세·감면 정비

(1)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.....	40
① 현행 제도 .....	40
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.....	40
(2)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.....	41
① 개정 취지 .....	41
② 전자신고세액공제가 전부 폐지되는지? .....	41
(3)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 등 .....	42
① 현행 제도 .....	42
② 납세조합 활용 납부 사례 .....	42
(4)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 .....	43
① 현행 제도 .....	43
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.....	43

(5) 지방이전지원세제 제도정비 .....	44
① 현행 제도 .....	44
② 개정 내용 .....	44
③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려는 것인지? .....	45
④ 내년에 이전하는 기업부터 적용되는 것인지? .....	45
(6) 중소기업 등 범위 합리화 .....	46
① 개정 내용 .....	46
② 개정 취지 .....	46
(7)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지급액 인하 .....	47
① 현행 제도 .....	47
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.....	47

### 3. 세원투명성 제고

(1)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 .....	48
① 현행 제도 .....	48
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.....	48
(2) 관세 성실신고확인 및 월별 확정납세신고제도 신설 .....	49
① 도입 취지 .....	49
② 제도 개요 .....	49
③ 성실신고확인을 의무제가 아닌 선택제로 하는 이유 .....	50
④ '28.1.1.부터 시행하는 이유 .....	50
(3)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강화 .....	51
①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.....	51
(4)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 .....	52
① 현행 제도 .....	52
②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.....	52
③ 주식 등의 이월과세는 양도일 전 1년으로 설정한 이유 .....	52
(5) 거주자 판정기준 보완 .....	53
①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.....	53
② 183일 기준 변경 관련 사례 .....	53
(6)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이행근거 마련 .....	54
①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(CARF) 개요 .....	54
② 교환대상 정보 .....	54
(7)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 범위 확대 .....	55
①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도 개요 .....	55
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.....	55

## Ⅳ.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

### 1. 납세자 편의 제고

(1)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 .....	56
①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.....	56
②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의 구체적 기준은? .....	56
(2) 해외직구 통관제도 개선 .....	57
①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.....	57
② '26년부터 시행하는 이유 .....	57
(3) 국외투자기구의 국채등 비과세 원천징수 절차 간소화 .....	58
① 현행 제도 .....	58
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.....	58
(4) 미수령 환급금 총당기준 상향 .....	59
① 현행 제도 .....	59
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.....	59

### 2. 납세자 권익 보호

(1)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제도 합리화 .....	60
① 현행 제도 .....	60
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.....	60
(2) 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연장 등 특례 적용대상 확대 .....	61
① 현행 제도 .....	61
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.....	61

## Ⅴ. 기타

(1) 연금계좌 추가납입 대상 확대 .....	62
① 연금계좌 세액공제 개요 .....	62
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.....	62
(2)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.....	63
① 글로벌 최저한세 개요 .....	63
② 국가별 실효세율·추가세액 계산방식 및 적용 예시 .....	64
③ 소득산입규칙 적용 예시 .....	65
④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 예시 .....	66
⑤ 신고기한 특례 규정 개정 내용 및 배경 .....	67



## I 경제의 역동성 지원

### 1. 투자 · 고용 · 지역발전 촉진

#### (1) 중견기업 범위 조정 (상세본 p.3)

##### ① 현행 조특법상 중견기업의 범위

- ☐ (중소기업 제외) 「조특법」상 중소기업이 아닐 것
- ☐ (업종) 소비성서비스업, 금융업, 보험 및 연금업,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이 아닐 것
- ☐ (독립성)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,  
②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30%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한 경우로서 최대출자자인 경우가 아닐 것
- ☐ (규모기준)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,000억원 또는 5,000억원 (R&D비용 세액공제 적용시) 미만인 기업일 것

##### ②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

- ☐ (개정 취지) 중견기업 업종 간 과세형평 제고
- ☐ (개정 내용) 중견기업 규모기준을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의 3배 (R&D 세액공제 적용시 5배)로 조정

#### < 중소·중견기업 업종별 매출액 기준 >

업종	의류 제조, 1차금속 제조 등	식료품 제조, 건설 도소매 등	운수창고, 정보통신 등	보건사회복지, 기타개인서비스 등	숙박음식, 교육서비스 등
중소기업 매출액 기준	1,500억원	1,000억원	800억원	600억원	400억원
중견기업	4,500억원	3,000억원	2,400억원	1,800억원	1,200억원
R&D 비용	7,500억원	5,000억원	4,000억원	3,000억원	2,000억원

\*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은 매 5년마다 소관부처에서 재검토

- (적용시점) 조특령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

## [2]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

(상세본 p.4)

### ① 현행 제도

- ☐ 중소기업 졸업 유예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넘어선 경우에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3년간 유지하는 제도

#### < 중소기업 졸업유예 제도 >

구분		내용
규모 기준	① 매출액	업종별 400~1,500억원 초과
	② 자산	자산총액 5,000억원 이상
	③ 관계회사간 매출액 합	업종별 400~1,500억원 초과
유예기간		최초 사유발생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

###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

- ☐ (졸업유예 기간 확대)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졸업유예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
- ☐ (상장기업 우대)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진출을 유도하고, 성장 잠재력이 큰 우수기업의 성장 가속화 및 밸류업을 지원하기 위해 코스피·코스닥 상장기업은 추가 2년 유예(3 → 7년)

### ③ 적용 시점

- ☐ 조특령 시행일(하반기 수시개정 예정)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매출액 또는 자산이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부터 적용

### [3] R&D,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(상세본 p.6)

#### ①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

□ **(개정 내용)** 매출액 또는 자산 증가로 최초로 중소기업을 졸업 (유예기간 종료)한 경우 3년(일반 R&D의 경우 5년)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중간 수준의 세액공제를 적용

□ **(개정 취지)** 기업 성장 시 세액공제율이 점진적으로 축소되도록 하여 기업 성장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

<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세액공제율 변화 >

(단위: %)

구 분	R&D비용 세액공제			투자세액공제		
	국가전략	신성장·원천	일반	국가전략	신성장·원천	일반
중소기업	40	30	25	25	12	10
중견기업 (현행→개정)	30 → 35	20 → 25	15 → 20	15 → 20	6 → 9	5 → 7.5

#### ② 점감구조 적용 시기

□ '25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을 졸업 (유예기간 종료)한 기업에 점감구조 적용

○ '21년 이후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여 이미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도 점감구조 적용 가능

\* (예) '21년에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여 3년('22~'24년)간 졸업이 유예되고 '25년에 중소기업을 졸업한 경우 점감구조에 따른 공제율 적용

#### ③ 코스닥상장 중견기업에 대한 우대 공제율을 폐지하는 이유는?

□ 이미 성장한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은 종료하되, 상대적으로 상장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상장을 집중 지원

○ 코스피·코스닥상장 중소기업은 졸업 유예기간 2년 추가 연장(3 → 7년)

#### [4] R&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(인건비)

(상세본 p.8)

##### ①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

- **(개정 내용)** R&D 세액공제 적용 시, 전체 연구 시간 중 주된 시간을 국가전략기술, 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에 투입한 연구인력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실제 투입시간에 따라 각각의 공제율 적용
  - \* (예) 연간 실제 투입시간 비율이 국가전략기술 90%, 일반 10%인 연구원:  
(현 행) 인건비의 100% 일반 공제율 적용 →  
(개정안) 인건비의 90%는 국가전략기술 공제율, 인건비의 10%는 일반 공제율 적용
  - \*\* 내국인이 실제 연구 투입시간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R&D 세액공제 신청 시 연구원의 실제 투입 시간 입증 자료를 국세청에 추가로 제출 필요
- **(개정 취지)** 연구원이 실제 연구한 시간에 맞게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국가전략기술 등 첨단 분야의 연구개발을 촉진
  - 국가전략기술 연구 시 해당 기술과 연관된 일반 연구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

## [5]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(상세본 p.11)

### ① 현행 제도

#### □ 세제지원을 통한 고용창출 유도

##### ○ (지원대상)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\* 수

\*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에서 임시직, 일용직, 초단시간 근로자 제외

- 상시근로자 수는 월별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한 후에 과세연도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

##### ○ (공제액) 기업규모·소재지·우대대상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, 정규직 전환 및 육아휴직 복귀자는 추가 공제

#### <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액 >

① 기본공제	공제액 (단위:만원)			
	중소(3년)		중견(3년)	대(2년)
	수도권	지방		
청년 정규직, 장애인, 60세 이상, 경력단절여성 등	1,450	1,550	800	400
그 외 상시근로자	850	950	450	-

② 추가공제	공제액 (단위:만원)	
	중소	중견
정규직 전환자(1년 지원)	1,300	900
육아휴직 복귀자(1년 지원)		

##### ○ (공제기간 및 사후관리) 상시근로자 수 유지시 최대 3년간 지원,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지원 중단 및 공제받은 금액 추징

## ② 개정 취지

### ① 세액공제의 예측가능성과 편의성을 높여 고용유인 기능 강화

- **(현황)** 계산의 복잡성·가산세 부담 등으로 고용유인 효과 제한
  - 기업의 채용시점에 공제여부가 불투명하여 세금 신고시 공제를 신청하지 않고, 경정청구를 거치게 됨에 따라 고용유인 기능 부족
  - 최초 공제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전액 추징되고, 계산이 틀릴 경우 가산세 등으로 세부담이 오히려 증가
- **(기대효과)** 기업이 고용에 대한 의사결정 시 공제여부와 공제액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해 고용창출 유인기능 강화

#### 【참고】 상시근로자 및 세액공제액 계산 예시

- (24년) 단시간 근로자 5명 4월 채용(전원 청년외, 수도권 중소기업 가정)  
→ (상시근로자)  $5 \times 0.5 \times 9/12 = 1.87\text{명} \uparrow$ , (세액공제)  $1.87 \times 850 = 1589.5\text{만원}$
- (25년) 단시간 근로자 중 3명 6월 퇴직, 9월 기간제 2명 채용  
→ (상시근로자)  $3 \times 0.5 \times 5/12 + 2 \times 0.5 + 2 \times 4/12 = 2.29\text{명}$ ,  
(세액공제) ①'24년분 1589.5 + ②'25년 신규( $2.29 - 1.87 = 0.42$ ) 357 = 1946.5만원
- (26년) 기간제 근로자 2명 1월 퇴직 → (상시근로자) 1명, (세액공제) 없음  
<추징> ①'24년분  $\Delta 1,479\text{만원} (\Delta 0.87\text{명} \times 2\text{년})$  + ②'25년분  $\Delta 357\text{만원} (\Delta 0.42\text{명} \times 1\text{년})$

### ② 기업의 탄력고용 인건비 증가에 대한 직접지원\*으로 임금격차 완화

\* 계속고용인원 유지·증가시 지원

- **(현황)** 지원 대상이 한정적이고, 근로여건 개선 지원 부족
  - 상대적으로 근로여건이 열악한 임시직·초단시간 근로자 등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
  -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으나, 전환이 어렵거나 부적합한 근로자\*의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은 부족
- \* 정년퇴직자, 자발적 비정규직, 단순노무직 등은 정규직 전환이 어렵고 부적합
- **(기대효과)** 탄력고용에 대한 인건비 지출 증가를 직접 지원하여 임금격차 완화 등 근로여건 개선에 도움

### ③ 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 예시

※ (계산의 전제) 지방 중소기업, 모두 청년, T년도 인건비 증가율 20% 미만, 연봉(기간제 3,000, 단시간 1,500, 초단시간 1,000만원), 입·퇴사일 매월 15일 가정

- (사례1) ①T년 3월 계속고용 근로자\* 5명 채용+②T+1년 3월 2명 퇴사  
\* 계약기간의 정함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통상 근로자

구분	현행		개정안	
	상시근로자 수(명)	공제/추징(만원)	계속고용	탄력고용
T	4.16 =5×10/12	6,448 =4.16×1,550	-	-
T+1	3.33 =3+2×2/12	△1,286.5 =-0.83×1,550	3명, 7,200만원	-
T+2	3.00	△511.5 =-(1.16-0.83)×1,550	3명, 7,200만원	-
합계	4,650만원(= 6,448 - 1,286.5 - 511.5)		14,400만원(= 7,200 + 7,200)	

- (사례2) ①T년 3월 기간제(1년 이상) 근로자 5명 고용 +  
②T+1년 12월 2명 퇴사, 3명 정규직 전환

구분	현행		개정안	
	상시근로자 수(명)	공제/추징(만원)	계속고용	탄력고용
T	4.16 =5×10/12	6,448 =4.16×1,550	-	2,500만원 =12,500 × 0.2
T+1	4.83 =3+2×11/12	11,386.5 =6,448(고용유지) +0.67×1,550(신규) +3×1,300(정규 전환)	-	175만원 =(13,750-12,875) × 0.2
T+2	3.00	△4,634.5 =-(4.16-3)×1,550×2 -0.67×1,550	3명, 7,200만원	-
T+3	-	-	3명, 7,200만원	-
합계	13,200만원(= 6,448 + 11,386.5 - 4,634.5)		17,075만원(= 14,400 + 2,675)	

- (사례3) ①T년 1월 계속고용 근로자 1명, 기간제(18개월) 근로자 1명 고용 +  
②T+1년 7월 기간제 1명 퇴사, 단시간·기간제(16개월) 2명 고용

구분	현행		개정안	
	상시근로자 수(명)	공제/추징(만원)	계속고용	탄력고용
T	2.00	3,100 =2×1,550	1명, 2,400만원	600만원 =3,000 × 0.2
T+1	2.00 =1+1×6/12 +0.5×2×6/12	3,100 =2×1,550(고용유지)	1명, 2,400만원	-
T+2	1.83 =1+2×0.5×10/12	△527 =-(0.17×2×1,550)	-	-
합계	5,673만원 (= 3,100 + 3,100 - 527)		5,400만원(= 4,800 + 600)	

## [6]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지원요건 완화

(상세본 p.13)

### ① 해외자원 개발을 위한 광업권·조광권 취득 방법

- ☐ 광업권·조광권\*의 ①직접 취득 뿐 아니라, ②간접 취득과 ③외국 자회사를 통한 취득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

\* (광업권) 일정한 지역에서 광물을 탐사하고 채굴할 권리  
(조광권) 타인의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·취득할 권리

① (직접 취득) 해외의 광업권·조광권을 취득

② (간접 취득) 광업권·조광권 취득을 위해 외국법인에 출자

- 외국법인은 해외자원개발사업 광구의 개발·운영을 목적으로 설립한 경우로서, 광업권·조광권을 소유한 경우로 한정

③ (외국자회사 통한 취득) 내국인이 100% 출자한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로서 ①, ②의 방법으로 광업권·조광권 취득

### ②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

- ☐ (개정 취지) 안정적인 자원 공급망 구축을 위해 핵심광물 등 해외자원 확보 역량 확충 지원 필요

- ☐ (개정 내용)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외국자회사 범위 완화

① 둘 이상의 내국인이 공동으로 100% 출자한 외국자회사도 포함

② 내국인 100% 출자 여부를 판단할 때, 외국자회사가 소재한 국가의 법률 등에 의해 해당국 정부 등이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지분은 제외



## 2. 기업경쟁력 제고

### (1) 가업상속·승계 제도 개선 (상세본 p.17)

#### ① 현행 제도

-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 
가업상속재산을 최대 600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공제
  -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간 업종·고용·자산·지분유지 등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, 사후관리의무 위반 시 상속세 부과

#### < 가업상속공제 제도 주요내용 >

구 분	요건 및 내용
대상 기업	▸ 중소기업 및 매출액 5,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
공제금액 및 한도액	▸ 공제금액 : 가업상속재산의 100% ▸ 공제한도 :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 : 300억원 20년 이상 : 400억원, 30년 이상 : 600억원
피상속인 요건	▸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 ▸ 비상장기업은 40%, 상장기업은 20% 이상 주식 10년 이상 계속 보유
상속인 요건	▸ 18세 이상 &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 ▸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, 2년 내 대표이사 취임
사후관리 (5년)	▸ (업종 유지 등) 주된 업종 유지(대분류내 변경 허용), 대표이사 종사, 1년 이상 휴·폐업 금지 ▸ (고용 유지) 정규직 근로자수 90% 이상 또는 총급여액 90% 이상 유지 ▸ (자산 유지) 가업용 자산의 40% 이상 처분 제한 ▸ (지분 유지)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 유지
양도소득세 이월과세	▸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가업상속재산을 추후 양도 시, 피상속인의 당초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

#### ② 가업상속공제 확대 취지

- 기업의 지속 성장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
  - 중소·중견기업이 상속세 부담에 얽매이지 않고 지속 성장  
하고,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

## [2]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(상세본 p.20)

### ① 현행 제도

□ 최대주주등\* 보유주식을 상속·증여하는 경우 20% 할증평가

\*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

- 단,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(매출액 5천억원 미만)이 발행한 주식 등은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

###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

□ 기업의 승계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·고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

-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는 부동산 등 일반 재산 상속이 아니라 기업승계와 관련된 것으로, 기업의 지속적 성장·고용 유지 등을 감안한 것임

□ 경영권 프리미엄은 상속·증여시점에서 측정하기 어렵고, 개별 거래의 특성 등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20% 할증평가하는 문제가 있음

\* 해외에서 할증평가를 실시하는 국가는 미국, 독일 등 소수에 불과함

### [3]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

(상세본 p.21)

#### ① 현행 제도

-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개별선박표준 이익\*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제도(일명 '톤세' 제도)

\* 개별선박표준이익 = 개별선박 순톤수 × 톤당 1운항일 이익 × 운항일수 × 사용률

- 동 제도는 해운산업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'05년 도입 후 5년 단위로 일몰 연장 중

\* 그리스, 일본, 노르웨이 등 20여 개 국가에서 톤세 제도를 운영 중

####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

- (개정 내용) 기준선박\*과 기준선박이 아닌 선박에 대한 톤당 1운항일 이익을 차등(기준선박이 아닌 선박에 대해 30% 할증)하여 적용

\* 해당 기업 소유 선박 +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+소유권 이전 연불조건부 리스 선박

#### < 톤당 1운항일 이익 >

개별선박 순톤수	톤당 1운항일 이익(단위: 원)		
	현행	개정안	
		기준선박	기준선박 외
1,000톤 이하분	14	(좌 동)	18.2
1,000~10,000톤	11		14.3
10,000~25,000톤	7		9.1
25,000톤 초과분	4		5.2

- (개정 취지) 물가 및 운임료 상승 등을 고려하여 '기준선박이 아닌 선박(용선)'에 대한 톤당 1운항일 이익 인상

- 선사가 직·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국적선박의 확충을 유도 함으로써 국내 선박건조 확대, 해운업 경쟁력 강화 도모

#### [4]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특례 신설

(상세본 p.23)

##### ①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개요

- 벤처기업 창업주의 의결권 보호를 위해 창업주에게만 발행되는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(「벤처기업법」 §16의11)
  - (요건)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100억원 이상의 투자로 창업주의 의결권 하락(30% 미만 또는 최대주주 지위 상실)
  - (존속기간) 최대 10년(유효기간을 정관에 규정)
  - (절차) 요건충족 후 주주 동의(발행주식총수의 3/4)를 얻어 발행
  - (현물출자) 총주주 동의 시 창업주가 보유한 보통주로 납입 가능

##### ②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

- (개정 취지) 최근 도입('23.11월)된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활성화를 통해 벤처기업의 성장 지원
- (개정 내용) 벤처기업 창업주\*가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을 위해 보통주식을 납입하는 경우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복수의결권 주식의 보통주식 전환시\*\*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
  - \* 벤처기업의 발기인 & 상무 이사 & 30% 이상 의결권 보유 최대주주 등(「벤처기업법」 §16의11)
  - \*\* 복수의결권주식 존속기간 만료, 복수의결권주식 상속·양도, 창업주의 이사직 상실, 벤처기업의 증권시장 상장 등(「벤처기업법」 §16의12)
  -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납부방식, 과세이연 신청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

## (5) 자기주식 관련 적격인적분할 요건 합리화

(상세본 p.25)

### ① 현행 제도

- (적격분할 과세특례) 적격요건을 충족하는 인적분할에 대해서는 분할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에 대해 과세이연\* 적용

\* (분할법인)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손익을 0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음  
(분할신설법인) 분할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수하고, '시가-장부가액' 차이는 해당 자산을 처분할 때 과세

- (적격분할 요건) 사업목적의 분할, 사업의 계속성, 고용 승계, 지분의 연속성 요건을 모두 충족\*할 필요

\* (사업목적) 5년 이상 계속하던 사업을 분할  
(사업의 계속성) 분할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유지  
(고용 승계) 근로자 80% 이상을 승계하고, 분할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해당 비율 유지  
(지분의 연속성) 지분비율대로 주식을 배정하고, 분할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

- 지분의 연속성 요건의 경우,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법인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배정하도록 규정

###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

- (개정 내용)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을 제외한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배정하는 경우에는 적격분할로 인정

- (개정 취지)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배정을 제한하는 「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\*」을 반영하여 적격분할 요건을 합리화

\* 현재 개정 추진 중(입법예고 기간: '24.6.4.~7.16.)

### 3. 자본시장 활성화

#### (1)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

(상세본 p.26)

##### ① 개정 취지

□ '코리아 디스카운트' 해소 및 자본시장 발전과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

○ 해외 주요 국가와 비교 시 우리나라의 주주환원 수준은 낮은 수준\*으로,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

\* 주요국 주주환원율(%), 배당성향+자사주매입률, '14~'23 평균):  
(韓)29 (美)91 (中)31 / (선진평균)67 (신흥평균)38

□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경영자와 투자자 간 유인구조를 일치 시킴으로써 주주환원 확대를 유도

○ 주주환원 확대는 주식 보유 수익률 상승으로 이어져 주식으로의 자금 유입과 기업 가치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

## ② 개정 내용(법인세 세액공제)

- ☐ (대상) ❶밸류업 자율공시를 이행하고, ❷배당·자사주소각으로 주주환원을 ❸확대 한 코스피·코스닥 상장기업

- \* ❶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「기업가치 제고 계획」 공시 이행  
 ❷ 배당(결산·중간·분기배당 포함) + 자사주소각 금액  
 ❸ 직전연도 대비 증가 + 직전 3년 평균 대비 5% 증가

- ☐ (과세특례) 주주환원 확대 금액에 비례하여 법인세 세액공제

- (공제 대상 금액)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금액 5% 초과 증가분\*

- \* 지배주주(특수관계자 포함)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제외

- (공제율) 5% (공제한도: 당해연도 총 주주환원금액의 1%)

- ☐ (적용기간) '25.1.1~'27.12.31.(3년간) 사업연도의 주주환원

## ③ 법인세 세액공제 계산사례

- ☐ (사례1) 주주환원금액이 '22~'24년 평균 1조원, '25년 1.2조원이고, 지배주주 지분비율이 20%인 甲 기업(자율공시 이행 상장법인)

법인	세액공제 대상 주주환원증가금액	세액공제 금액
甲	대상 금액 = 1,200억원 = [12,000억원 - (10,000억원 × 1.05)] × 80%	세액공제 금액 = 60억원 = Min [1,200억원 × 5%, 12,000억원 × 1%] * 공제한도: 총 주주환원금액의 1%

- ☐ (사례2) 주주환원금액이 '22~'24년 평균 0.8조원, '25년 1.2조원이고, 지배주주 지분비율이 30%인 乙 기업(자율공시 이행 상장법인)

법인	세액공제 대상 주주환원증가금액	세액공제 금액
乙	대상 금액 = 2,520억원 = [12,000억원 - (8,000억원 × 1.05)] × 70%	세액공제 금액 = 120억원 = Min [2,520억원 × 5%, 12,000억원 × 1%] * 공제한도: 총 주주환원금액의 1%

#### ④ 개정 내용(배당소득 분리과세)

□ (대상) 주주환원 확대 상장기업\*의 개인주주(비거주자 및 법인주주 제외)

\*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기업과 동일(①「기업가치 제고 계획」 공시를 이행한 상장법인으로서, ②주주환원금액 직전연도 대비 증가 & 직전 3년 평균대비 5% 이상 증가한 경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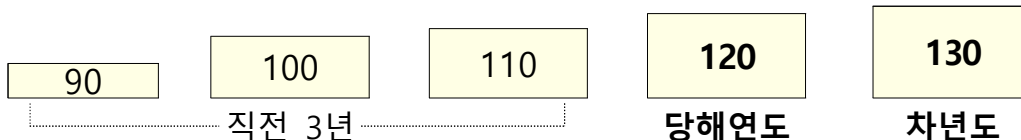
□ (과세특례) 주주환원 확대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배당(결산·중간·분기배당)의 일부를 분리과세

○ (대상 소득금액) 차년도 현금배당 × 분리과세 소득금액 비율\*

$$* \text{분리과세 소득금액 비율} = \frac{\text{직전 3년 평균 대비 증가분} + \text{직전 3년 평균 주주환원금액} \times 10\%}{\text{직전 3년 평균 주주환원금액}}$$

#### 【참고】 분리과세 소득금액 비율 사례 적용

■ 직전3년평균 주주환원 100, 당해연도 120(증가율 20%), 차년도 130 배당 가정



■ 소득금액 비율 =  $\frac{20 + 100 \times 10\%}{100} = 30\%$

⇒ 분리과세 금액 =  $130 \times 30\% = 39$

○ (과세방식) 현금배당 금액 중 대상소득금액의 일부를 9% 원천징수, 종합과세 대상은 25% 분리과세 선택 허용

- 종합과세자는 ①25% 분리과세 또는 ②종합과세(2천만원 한도 9%) 중 선택

\* ① 배당 증가금액 등 × 25% + 그 외 배당 × 비교 종합과세

② 배당 증가금액 등(2천만원 한도) × 9% + 그 외 배당 × 비교 종합과세

□ (적용기간) '26.1.1.~'28.12.31.까지 지급받는 배당금



## ⑤ 배당소득 분리과세 계산사례

- 甲사(자율공시 이행한 상장법인)가 '22~'24년 평균 1,000억원 '25년 1,200억원 주주환원  
→ 甲사 개인주주의 분리과세 소득금액비율 : 30%(증가율20%+10%)
- '26년 甲사 개인주주 소득내역 <과세특례 대상 소득금액>
  - 주주A : 배당소득 1,200만원, 다른소득 없음 → 360만원(1,200만원×30%)
  - 주주B : 배당소득 3,600만원, 다른소득 없음 → 1,080만원(3,600만원×30%)
  - 주주C : 배당소득 3,600만원, 다른소득 10억원

주주	산출세액(지방세 제외) 및 납부방법	경감액
A	현행 168만원 원천징수(1,200만원×14%)로 납세 종결	△18만원
	개정 150만원 원천징수(360만원×9% + 840만원×14%)로 납세 종결	
B	현행 504만원 납부 =Max[㉠3,600만원×14%, ㉢2천만원×14%+1,600만원×기본세율]	△54만원
	개정 Min[①,②] = ② 450만원 납부 ①(25% 분리과세 선택) 622.8만원 =1,080만원×25% + Max[㉠2,520만원×14% ㉢2천만원×14%+520만원×기본세율] ②(25% 분리과세 선택X) 450만원 =Max[㉠1,080만원×9%+2,520만원×14% ㉢1,080만원×9%+920만원×14%+1,600만원×기본세율]	
C	현행 39,406만원 납부 =Max[㉠3,600만원×14% + 10억×기본세율 ㉢2천만원×14% + 10억1,600만원×기본세율]	△216만원
	개정 Min[①,②] = ① 39,190만원 납부 ①(25% 분리과세 선택) 39,190만원 =1,080만원×25% + Max[㉠2,520만원×14%+10억원×기본세율 ㉢2천만원×14%+10억520만원×기본세율] ②(25% 분리과세 선택X) 39,352만원 =Max[㉠1,080만원×9%+2,520만원×14%+10억원×기본세율 ㉢1,080만원×9%+920만원×14%+10억1,600만원×기본세율]	

## ⑥ 주주환원 촉진세제와 배당소득증대세제의 차이점

- (도입취지) 주주환원 촉진세제는 '코리아 디스카운트'를 해소하고 자본시장 발전과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기업 소득 환류를 통한 가계소득 증대 목적의 배당소득증대세제와 차이
- (적용대상 · 요건) 적용 대상을 주주(주식시장의 수요자)에서 기업(공급자)까지 확대하고, 요건을 단순화하여 정책 체감효과 증대
  - 또한, 결산배당만을 대상으로 하였던 배당소득 증대세제와 달리 중간배당 및 분기배당도 포함하여 정책 실효성 확대

	'14년 배당소득증대세제	'24년 주주환원 촉진세제(안)
도입 취지	▶ 기업이익의 가계소득 환류를 통한 내수 활성화	▶ 주주환원 촉진을 통한 기업가치 증대 * 주주환원: 배당 및 자사주소각
지원 내용	법인세	▶ 주주환원 증가금액의 5% 세액공제
	배당소득세	▶ (분리과세) 14 → 9% ▶ (종합과세) '15년 25% 분리과세 '16-'17년 5% 세액공제
핵심 요건	▶ 배당증가율, 배당성향, 배당수익률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고배당 기업(요건이 복잡하고 엄격)	▶ 「기업가치 제고 계획」 공시 + 직전 3년 대비 주주환원금액을 5% 초과하여 증가시킨 기업 (요건 단순화)
적용 범위	▶ 현금배당*(전체) * 결산배당(중간배당 제외)	▶ (법인세) 배당*+자사주소각 * 결산배당(중간배당 포함) ▶ (배당소득세) 현금배당*(일부) * 결산배당(중간배당 포함)

\* : 배당소득증대세제 대비 지원 확대사항

## [2]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 세제지원 확대

(상세본 p.29)

### ① 개정 취지

□ 국민의 자산 형성 및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충 지원을 위해  
납입·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

○ 부동산에 편중된 투자를 주식·펀드 등 금융자산 투자로 유도

□ ISA 도입('16.3월) 이후 현재까지 납입한도(年 2천만원, 총 1억원)  
및 비과세 한도(일반형 200만원\*)가 동일하게 유지되어 온 점도 감안

\* 서민형의 경우 '18년부터 250 → 400만원으로 비과세한도 상향

### ② 국내투자형 ISA에서 국내주식형 펀드의 개념

□ 국내 상장주식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는 펀드

○ 국내 상장주식 의무 투자 비율은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 등을  
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계획

### ③ 국내투자형 ISA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가입을 허용 하는 이유

□ 금융자산이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 및 국내 주식시장 수요기반  
확충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취지

○ 금융소득종합과세자를 포함한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·부동산  
투자수요를 국내 주식시장으로 유도

□ 한편,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경우 납입한도(2억원) 내 비과세 및  
저율 분리과세(9%) 적용 없이 14% 분리과세 혜택만 적용

### [3] 조각투자상품\* 이익 과세분류 규정 마련 (상세본 p.31)

\* 미술품·저작권·부동산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에 대한 권리를 투자계약증권 또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형태로 분할·발행하여 다수 투자자가 투자거래하는 신종 투자상품

#### ①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

- ☐ (개정 취지) 조각투자를 통해 투자자에게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 세법상 과세분류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예측가능성 제고
- ☐ (개정 내용) 조각투자상품에 해당하는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으로부터 얻는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분류
  - 해당 조각투자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한 모든 이익(환매·매도, 해지, 해산 포함)을 배당소득(원천징수 대상)으로 함

#### ② 조각투자상품에 해당하는 증권의 구체적 범위

- ☐ 조각투자 서비스 취지\*, 조세회피 가능성\*\*, 최근 금융당국(금융위·금감원)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마련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\*\*\* 내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예정

\* 다수의 소액투자를 위한 것으로 증권의 공모(50인 이상)를 전제

\*\* 기초자산으로부터 수익이 계속적으로 창출되는 경우 소득의 무기한 유보 방지 필요

\*\*\* 조각투자 가이드라인('22.4월), 신탁수익증권 가이드라인('23.12월) 등

#### ③ 배당소득 과세시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하는 것 아닌지?

- ☐ 투자 방식이 유사한 펀드와 유사한 방식·수준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금융투자상품 간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것
- ☐ 조각투자를 개별 기초자산의 성격에 따라 소득 분류시 신고·납부 등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는 점도 감안

#### [4] 펀드(집합투자기구)이익 계산방법 합리화

(상세본 p.35)

##### ① 현행 펀드 과세체계 및 개정 내용

- (펀드 과세체계) 펀드 이익의 분배, 펀드 수익증권 환매·양도로 발생하는 이익을 합산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되, 직접투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펀드가 투자하는 증권의 일정 이익은 과세 제외
- (개정 내용) 해외주식 등과 과세형평성을 고려하여 펀드이익에 국내상장 해외주식형ETF·ETN(이를 기반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포함)의 거래 또는 평가이익을 포함하여 계산

< 펀드 이익 계산에 포함 >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■ 채권 등   ■ 해외주식   ■ 외국펀드</li><li>■ 주가지수 기반 장내파생상품(KOSPI200선물 등)</li><li>■ 해외상장 해외주식형ETF·ETN</li><li>■ <b>국내상장증권 중 해외주식형ETF·ETN</b></li><li>■ <b>국내상장 해외주식형증권 중 ETF·ETN 기반 장내파생상품</b></li></ul>	<div>&lt; 계산에서 제외(열거) &gt;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■ 국내상장 증권</li><li>■ 국내상장 증권 기반 장내파생상품</li><li>■ 벤처기업 주식·출자지분</li></ul>

- (개정 취지) 해외주식, 해외상장 해외주식형 ETF·ETN의 경우 과세대상 펀드이익에 포함되고 있으므로,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·ETN(이를 기반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포함)도 과세대상에 포함

##### ② 시행시기

- 소득령 시행일 이후 펀드에 편입하는 증권 및 파생상품부터 적용
- 소득령 개정안은 '24.8월 입법예고 거쳐 9월 중 공포·시행 예정

## Ⅱ

## 민생경제 회복

### 1. 결혼 · 출산 · 양육 지원

#### (1) 결혼세액공제 신설 (상세본 p.36)

##### ① 개정 취지

##### □ 결혼비용 지원을 통한 혼인 유도

- 만혼 · 비혼에 따른 혼인을 하라기 저출산 추세 심화 → 유배우 출산율이 합계출산율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혼인 유도를 통한 출산율 제고 필요

##### ② 적용 시기

##### □ '24년부터 '26년까지의 기간에 혼인신고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

- '24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'25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적용

##### ③ 적용 사례

##### □ (사례1) 30살 A(초혼)와 28살 B(초혼)가 '24년 3월 혼인신고

→ '25년 연말정산 시 A와 B 모두 50만원씩 세액공제

##### □ (사례2) 결혼세액공제를 받은 40살 C씨(재혼), 35살 D(초혼)가 '26년 3월 혼인 신고

→ '27년 연말정산 시 D만 50만원 세액공제 적용

##### □ (사례3) 결혼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적이 없는 E(재혼)와 F(재혼)가 '26년 7월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

→ '27년 연말정산 시 E와 F 모두 50만원씩 세액공제

## [2]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(상세본 p.39)

### ① 개정 취지

- ☐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한 기업의 노력에 대해 추가 세부담이 없도록 지원함으로써 저출생 극복 노력 뒷받침
- 아울러, 근로자가 기업으로부터 큰 금액의 출산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일시에 근로소득세 부담이 커지는 문제 해소

### ② 현재 출산·양육수당과 구분

- ☐ 출산수당과 양육수당을 분리하여 출생일 이후 2년 내에는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, 양육수당은 월 20만원 비과세가 적용
- 현재 양육수당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하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(현행 유지)
- 출산지원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양육수당과 별개로 출산과 관련하여 일시(최대 2회 분할 지급)에 지급받는 급여

### ③ 적용 특례

- ☐ ('25.1.1. 이후 지급하는 출산지원금)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지급하는 분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
- ☐ ('24.1.1.~'24.12.31. 지급한 출산지원금) 개정 전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기업에 대해서도 개정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자녀의 출생일이 '21.1.1. 이후인 경우 비과세 적용

#### ④ 특수관계자에 대해 비과세 제한 이유

- 기업 출산지원금을 조세회피에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주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

#### ⑤ 세부담 완화 사례

- A회사에 종사하는 총급여 5,000만원인 B씨가 '25.1.1.에 자녀를 출산하여 회사에서 '25.6.1. B씨에게 출산지원금 1억원을 지급한 경우

- (비과세 적용 전 근로소득세) 약 2,440만원\*

- (비과세 적용 후 근로소득세) 약 260만원\*

\* 동일 급여수준의 평균적인 소득·세액공제를 적용한 결정세액

→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로 약 2,180만원의 세부담 경감



### [3]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

(상세본 p.40)

#### ①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

- ☐ (개정 취지) 저출생 극복을 위해 유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
- ☐ (개정 내용)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·손자녀(8~20세)에 대한 자녀세액공제금액 확대

자녀세액공제		현행(만원)	개정(만원)
자녀세액공제 (8~20세)	1명	15	25
	2명	35	55
	3명 이상	$35+30\times(\text{자녀수}-2)$	$55+40\times(\text{자녀수}-2)$

#### ② 기대 효과

- ☐ 유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자녀양육부담 완화 및 출산 유인 효과 기대
  - 특히, 자녀 수에 따라 공제금액을 확대함으로써 출생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에도 추가 출산 유인 제공
- ☐ 자녀세액공제 확대는 결혼·출산에 친화적 성격의 세제를 만들어 결혼·출산에 대한 긍정적 사회적 분위기 조성

## 2. 시민·중산층 부담 경감

### [1] 수영장·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

(상세본 p.41)

#### ① 현행 제도

□ 도서공연비 등에 사용하는 신용카드 등에 대해 소득공제(30%) 적용

#### <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주요내용 >

구 분	구체적 내용																								
공제대상	총급여의 25% 초과 사용금액																								
공제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신용카드 : 15%</li><li>○ 현금영수증·직불형카드 등 : 30%</li><li>○ 도서·공연·박물관·미술관·영화관람료(도서공연비) 사용분 : 30% (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)</li><li>○ 전통시장·대중교통 사용분 : 40%</li></ul>																								
공제한도	<table><tr><th colspan="2" rowspan="2">공제한도</th><th>총급여</th><th>7천만원 이하</th><th>7천만원 초과</th></tr><tr><th></th><th></th><th></th></tr><tr><td colspan="2">기본공제 한도</td><td></td><td><u>300</u></td><td><u>250</u></td></tr><tr><td rowspan="3">추가공제 한도</td><td>전통시장</td><td rowspan="3"><u>300</u></td><td rowspan="3"></td><td><u>200</u></td></tr><tr><td>대중교통</td><td></td></tr><tr><td>도서공연등</td><td>-</td></tr></table>			공제한도		총급여	7천만원 이하	7천만원 초과				기본공제 한도			<u>300</u>	<u>250</u>	추가공제 한도	전통시장	<u>300</u>		<u>200</u>	대중교통		도서공연등	-
공제한도		총급여	7천만원 이하			7천만원 초과																			
기본공제 한도			<u>300</u>	<u>250</u>																					
추가공제 한도	전통시장	<u>300</u>		<u>200</u>																					
	대중교통																								
	도서공연등			-																					

## ②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

- **(개정 취지)** 서민·중산층의 대중 체육시설(수영장, 체력단련장) 이용\*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제적 지원

\*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규칙적인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관리 유지 비중이 낮음  
(2023 국민생활체육조사)

- 월 소득수준별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관리 비중(%)

: (100만원 미만) 9.3 (200~300만원) 9.7 (400~500만원) 14.7 (900만원 이상) 23.7

- **(개정 내용)** 대중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

○ **(대상시설)**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('23년 기준 약 13,000여개)

○ **(공제대상)** 체육시설 이용료(개인훈련비 등 강습료 제외)

○ **(소득요건)**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

○ **(공 제 율)** 3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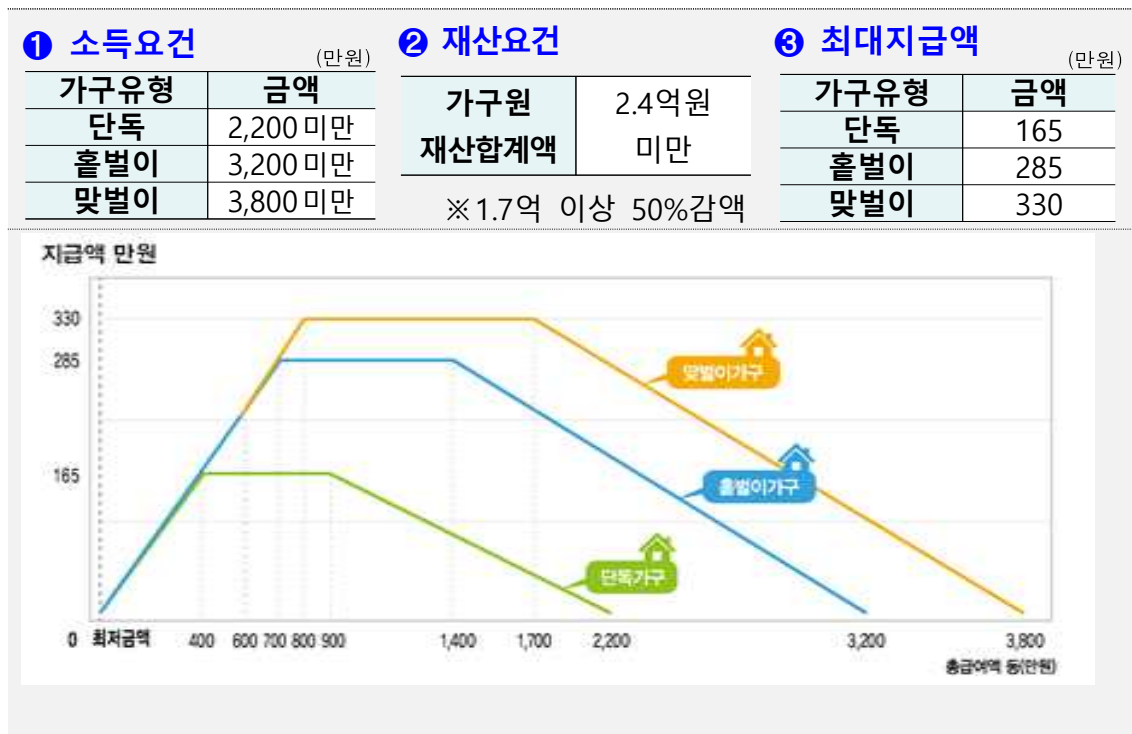
○ **(공제한도)** 추가공제한도(300만원)에 포함

○ **(적용시기)** '25.7.1. 이후 지출하는 이용료부터 적용

## [2] 근로장려금(EITC) 맞벌이가구의 소득상한금액 인상 (상세본 p.43)

### ① 근로장려금(EITC) 개요

- ☐ (도입목적)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장려 및 소득지원('08년 도입)
- ☐ (지원대상) 근로·사업·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
- ☐ (산정방식) 부양가족(자녀·직계존속) 유무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가구유형을 3가지로 분류하고, 소득에 따른 EITC 지급액 산정



- ☐ (지급시기) 과세연도 발생 소득에 대해 다음 해 9월에 지급
  - \* 근로소득자의 경우 반기별 지급 가능(12월 및 다음 해 6월, 연 2회)
- ☐ (지급실적, '22년 귀속) 416만 가구, 4.6조 원

##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

- ☐ **(개정 내용)**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을 현행 3,800만원 미만에서 단독가구(2,200만원)의 두 배 수준인 4,400만원 미만으로 확대
- ☐ **(개정 취지)** 혼인이 근로장려금 수급 시 패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맞벌이가구의 소득상한금액 인상

## ③ 개정 효과

- ☐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 완화(3,800 → 4,400만원)로 약 5만가구가 수혜가구에 추가될 것으로 예상

### [3] 채용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

(상세본 p.47)

#### ① 현행 제도

##### ☐ 경력단절여성 세제지원 제도

- (통합고용 세액공제 우대) 출산 등으로 퇴직한 경력단절여성\*이 동종업종에 재취업하는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\*\*

\* 경력단절여성 공제액 우대(만원): (중소기업)+600 (중견기업)+350 (대)+400

\*\* 우대 대상: 청년, 60세 이상 고령, 장애인, 경력단절여성

- (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)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력단절여성은 취업한 날부터 3년간 소득세 70% 감면\*

\* 감면 대상: 청년(5년간 90% 감면), 60세 이상 고령, 장애인, 경력단절여성

##### ☐ 경력단절여성 요건

- ❶ 퇴직 전 만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
- ❷ 퇴직 전 업종과 동일한 업종(표준산업 중분류)의 기업에 취직할 것
- ❸ 결혼·임신·출산·육아·자녀교육 사유로 퇴직
- ❹ 퇴직 후 2~15년 이내일 것

####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

- ☐ (경력단절남성 지원) 육아 등에 따른 경력단절은 남녀 공통의 문제로 맞벌이 보편화 등 사회변화에 맞춰 남성도 지원

- ☐ (업종제한 폐지) 경력단절자의 원활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동일업종(표준산업 중분류) 재취업 요건 폐지

- ☐ (퇴직사유 추가) 장애자녀 양육시 연령제한(8세)을 적용하지 않고, 70세 이상 또는 장애 부모 돌봄으로 인한 퇴직도 인정

#### [4]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(상세본 p.48)

##### ①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

- ☐ (개정 취지)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 지원
- ☐ (개정 내용) 친환경자동차(하이브리드·전기·수소차)의 보급 확대를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(~'26.12.31.)
  - 다만, 하이브리드차는 감면한도를 현행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조정하고, 전기·수소차는 현행 유지

<친환경차량 개별소비세 감면제도 개정내용>

감면한도	하이브리드자동차	전기자동차	수소전기자동차
개별소비세	100만원→70만원	300만원	400만원
(교육세 등 포함시)	(143만원→100만원)	(429만원)	(572만원)

##### ② 하이브리드차의 감면한도를 축소할 이유는?

- ☐ 최근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 추이, 심층평가 결과\* 등을 감안한 것임

\* '22년 조세특례 심층평가(KDI) : 하이브리드차는 내연기관차와의 경쟁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지원규모의 단계적 축소방안을 고려할 필요

### 3. 소상공인 · 중소기업 지원

#### [1] 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 분할 과세특례 신설 (상세본 p.54)

##### ① 현행 제도

- 현재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과세
  - 건설기계는 경우 '18.1월 이후 취득분부터 과세대상에 해당 ('20년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)

##### ② 개정 취지

- 건설기계 개인사업자의 고가 건설기계 처분에 따른 세부담 급증 완화 및 노후화된 기계 대체를 통한 산업안전 강화
    - 고가의 건설장비를 1대만 보유·대여하는 사업자의 경우, 장부가액이 낮은 건설기계 처분시 일시적으로 세부담 급증\*
- \* 신규 건설기계 구입을 위해서는 기존 노후된 건설기계의 처분이 필요하나 세부담으로 인해 처분을 하지 못하는 상황



### ③ 적용 사례

□ (가정) 건설장비 운영업자가 '20년 건설용 크레인 구입(취득가 2억원) 후  
'25.1.1. 해당 기계장치를 1억 원에 처분하는 경우

○ 건설용 크레인의 내용연수(5년) 동안 감가상각비(연 4천만원)를  
필요경비로 계상 → '25.1.1. 현재 장부가액 0원

○ '25.1.1. 처분시 처분이익 1억원 [1억원 - 장부가액(0원)]

□ (세부담 변화)

○ (현행) 소득세 부담 1년간 1,956만원(적용 최고세율 35%)

○ (개정) 소득세 부담 4년간 총 1,032만원(적용 최고세율 15%)

구 분	'25년	'26년	'27년	'28년
총수입금액* (소득금액)	1,000만원	3,000만원	3,000만원	3,000만원
세액	60만원	324만원	324만원	324만원

\* 별도 필요경비는 없는 것으로 가정

## [2] 주류 관련 제도 개선

(상세본 p.58)

### ① 탁주의 첨가원료를 확대(향료·색소 추가)한 이유는?

- ☐ 탁주에 허용가능한 첨가물의 확대로 다양한 맛과 향의 제품 개발·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
- ☐ 현재는 막걸리에 향료·색소를 첨가하여 제품을 출시하는 경우, 탁주가 아닌 기타주류로 분류
  - 개정 시에는 탁주로 분류되어 상표명에 "탁주·막걸리"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, 세부담 경감

#### 【참고】세부담 변화 예시

- 막걸리에 향료·색소를 첨가한 **출고가격 1천원, 용량 750ml 인 주류 1병** 세부담
  - (현행) **기타주류**로 분류(세율: 과세표준\*의 30%) → **246원**
    - \* 과세표준은 출고가격의 81.9%(기준판매비율 18.1% 적용)
  - (개정) **탁주**로 분류(세율: 1ℓ 당 44.4원) → **33원**

### Ⅲ 조세체계 합리화

#### 1.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

##### [1-1] 상속·증여세율 및 과표 조정 (상세본 p.62)

##### ① 현행 상속·증여세 과세 표준 및 세율

과세표준	세율
1억원 이하	10%
5억원 이하	20%
10억원 이하	30%
30억원 이하	40%
30억원 초과	50%

##### ② 개정 취지

- ☐ 물가·자산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,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·증여세율 및 과표 조정
- ☐ 우리나라 상속·증여세 세율 및 과세표준은 물가·자산가격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 유지되어 있음
- ☐ OECD 회원국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(26%) 및 주요국 상속세율 수준을 감안하여 상속세율 하향 조정

##### < 주요국 상속세 최고세율 >

	미 국	영 국	일 본	독 일	프랑스
상속세 최고세율	40%	40%	55%	30%	45%

## [1-2]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상향

(상세본 p.63)

### ① 상속세 인적공제 개요

구 분		'97년	현 행
기초 공제		2억원	
인적 공제	자녀·연로자	1인당 3천만원	1인당 5천만원
	미성년자	20세까지 연수 × 5백만원	19세까지 연수 × 1천만원
	장애인	75세까지 연수 × 5백만원	기대여명 연수 × 1천만원
일괄공제*		5억원	
배우자 공제		법정상속지분 내 실제 상속분(5~30억원)	

\* '기초공제+인적공제'와 일괄공제 5억원 중 선택 가능(배우자 공제는 별도)

### ② 개정 취지

- ☐ 중산층 세부담 경감, 물가·자산가격 상승 등을 감안하여  
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상향(5천만원 → 5억원)

## [2] 가상자산 과세 유예

(상세본 p.64)

### ① 가상자산 과세 유예 이유

-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 시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2년간 과세 시행 유예
  -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율을 위한 「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」의 시행('24.7.19.) 성과 등 점검 필요
-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 교환 개시 시기도 감안
  - 가상자산 거래 관련 국제적 정보교환이 '27년('26년 과세기간분) 개시 예정으로, 해외거래 검증 자료로 활용 가능

### [3]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

(상세본 p.68)

#### ① 개정 취지

- ☐ 주요 기업 등은 자사 및 계열사 직원에 대하여 복리후생 명목으로 자사제품 구입 시 할인가격 적용
  - 종업원 할인혜택에 대한 명확한 과세규정이 없어 과세여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

#### ② 시가의 판단기준

- ☐ 세법상 시가 판단기준에 따라 실제 거래한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
  - 통상 할인적용 전 판매가격 또는 쇼핑몰 등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되, 동일기간 일반소비자와 거래한 가격이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 가능

#### ③ 할인금액 적용 사례

- ☐ (사례1) A 자동차 회사는 종업원에게 판매가격(4,000만원)의 25% 할인, 종업원 甲은 25% 할인받아 3,000만원에 구매
  - 甲의 할인금액(1,000만원),  
비과세 한도 =  $\text{Max}[\text{시가의 } 20\%, 240\text{만원}] : 800\text{만원}$
  - 할인금액 중 비과세 한도(800만원)를 초과하는 200만원 근로소득 과세
- ☐ (사례2) B 전자제품 회사는 종업원에게 판매가격(300만원)의 30% 할인, 종업원 乙은 30% 할인받아 210만원에 구매
  - 乙의 할인금액(90만원),  
비과세 한도 =  $\text{Max}[\text{시가의 } 20\%, 240\text{만원}] : 240\text{만원}$
  - 할인금액이 비과세 한도(240만원)보다 작으므로 전액 비과세

#### [4]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기준 합리화

(상세본 p.70)

##### ① 현행 제도

-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일정 수준 초과 시 그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제도
  - (손금불산입 금액) 조정소득금액의 30%를 초과한 이자비용
  - (적용 예외)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'금융 및 보험업'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이자비용 전체에 대해 손금산입 허용

#####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

- (개정 내용) 적용 예외 대상인 금융·일반지주회사 중, 일반지주회사는 예외대상에서 제외하여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\*
  - \* 적용 예외 대상: (현행) 금융·일반지주회사 → (개정안) 금융지주회사
- (개정 취지)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 배제 취지를 고려
  - '금융 및 보험업'의 경우 업종 특성상 차입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, 과다지급이자에 대해서도 전액 손금산입 허용
  -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는 '금융·보험업을 영위하지 않는 회사'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,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와 달리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

## 2. 비과세 · 감면 정비

### [1]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

(상세본 p.71)

#### ① 현행 제도

□ (도입 배경) 신용카드 사용 촉진을 통한 과표 양성화

□ (적용 대상) 전년도 공급가액 10억 원 이하

\* 영수증 발급 대상인 소비자 상대 업종(소매업, 음식점업 등) 개인사업자

□ (공제 내용)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.3%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\*

\* [공제율] 1.3%('27년 이후 1%) [공제한도] 1천만원('27년 이후 500만원)

####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

□ (개정 내용) 전년도 공급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해 공제율을 50% 하향 조정(1.3→0.65%, '27년 이후 1.0→0.5%)

□ (개정 취지) '94년 제도 도입 이후 신용카드 사용 일반화 등 감안 시 제도 효과성이 낮음\*

\* '22년 심층평가 결과(KDI) : 제도 도입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으므로 제도 축소 필요

○ 현재는 공급가액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공제대상자에게 동일한 공제율 적용 중 → 상위 사업자에 한하여 공제율 축소



## [2]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(상세본 p.72)

### ① 개정 취지

□ ①전자신고 정착, 관련 ②인프라 확충 등의 환경 변화를 반영

#### ① 종합소득세·법인세·부가가치세 전자신고율이 97% 상회\*

\* 전자신고율('03→'22년 %): (종합소득세)43.5→99.5 (법인세)92.7→99.6 (부가가치세)33.8→97.1

#### ② 전자신고 인프라\*가 크게 확충되어, 지금은 세액공제 도입 시에 비해 전자신고가 간편

\* 홈택스(인터넷), 손택스(스마트폰), 국세청이 보유자료를 활용해 납세자의 세금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주는 서비스(모두채움서비스, 세금비서) 등

□ 해외 주요국(영국, 일본 등)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한시적으로만 운영(1~6년)하였으며, 제도가 정착된 뒤에는 폐지

### ② 전자신고세액공제가 전부 폐지되는지?

□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비율은 여전히 50%대('23년 52.3%)에 머무르고 있어, 당분간 양도소득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유지할 계획

### [3]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 등 (상세본 p.73)

#### ① 현행 제도

-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근로자 및 영세한 사업자가 조합을 결성하여 매월 조합원의 소득세를 징수·납부

조합유형	조합원 수	조합원 자격
근로자조합	50명 이상	국외에 있는 외국법인, 외국기관 등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
사업자조합	20명 이상	농·축·수산물 판매업자(복식부기의무자 제외), 노점상인

- 납세조합에 매월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(미이행시 가산세 부과)하되,  
 ①조합원 세액공제, ②납세조합에 교부금 지급 등 혜택 부여

- \* ① 조합원 소득세액의 5% 세액공제 적용(조합원 1인당 연 100만원 한도)  
 ② 납세조합에 징수세액의 2%를 교부금으로 지급(조합원 1인당 30만원 한도)

#### ② 납세조합 활용 납부 사례

- 해외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A로부터 급여를 받는 내국인 근로자  
 甲은 원칙상 종합소득세 신고(5월) 대상\*

- \* 내국법인인 외국계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내국법인이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, 국외 소재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음

- 단, 납세조합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 
 매월 조합에서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 납부 & 연말정산 대행

#### [4]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

(상세본 p.74)

##### ① 현행 제도

- 창업을 유도하고 사업초기 세부담 경감을 통해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(벤처확인) 후 5년간 법인세·소득세 감면
  - 수도권과밀억제권역·청년·업종 등에 따라 감면을 차등 적용
    - \* (일반 창업) 과밀 0%, 과밀 밖 50% / (청년·생계형) 과밀 50%, 과밀 밖 100% (신성장 서비스업) 초기 3년간 +25%p 감면을 상향

#####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

-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적용기한을 3년 연장(~'27.12.31.)하고, 고용 증가 시 적용하는 감면율 인상(고용증가율의 50% → 100%)
  - 다만, 특정 기업에 감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도설정(연간 5억원)
- 지방보다 창업 여건이 양호한 과밀억제권역 밖의 수도권 지역에 대한 감면율 인하(단, 인구감소지역은 현행 유지)
  - \* (현행) 일반 50%, 청년·생계형 100% → (개정안) 일반 25%, 청년·생계형 75%
- '26.1.1. 이후 창업분부터 적용하여 1년간 감면율 유예
- 업종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신성장서비스업\* 우대 감면율 (초기 3년 +25%p) 적용기한 종료
  - \* S/W(정보서비스 등), 콘텐츠(영상제작 등), 관광, 물류, 사업서비스, 교육

## (5) 지방이전지원세제 제도정비

(상세본 p.75)

### ① 현행 제도

□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 감면

- (대상) 수도권과밀억제권역\* 안에 소재하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

\*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

-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지방이전지원세제 적용

- (감면율) 이전지역에 따라 차등

- \* ① 5년 100% + 2년 50%: 수도권, 지방 5대 광역시, 대도시(인구 30만 이상)
- ② 7년 100% + 3년 50%: 지방 5대 광역시 및 대도시 중 낙후지역
- ③ 10년 100% + 2년 50%: 그 외 낙후지역

### ② 개정 내용

□ 수도권 안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

□ 다만 여전히 정주여건 등이 여타 수도권 지역에 비해 불리한 수도권 인구감소지역\*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현행 유지

\*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 지역, 현재 수도권 중에서는 강화, 옹진, 연천, 가평이 이에 해당

#### < 개정안 주요내용 >

이전 前	이전 後	허용여부
수도권 과밀억제 권역	수도권 안 (과밀억제권역 밖)	(현행) 허용 → (개정안) 인구감소지역으로 한정 ※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허용
	수도권 밖	허용

### ③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려는 것인지?

☐ '지방'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변함없음

-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던 공장을 '수도권 밖'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감면 적용
- 감면요건 개정\* 목적은, 적용대상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 이전지원세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

- \* ① 이전 전 10년 내에 지방이전지원세제 감면을 받은 기업은 제외,  
② 이전 후 영위 업종이 이전 전 2년 이상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경우에만 감면 적용

☐ 수도권 집중도가 지속적으로 심화됨에 따라, 수도권 인구의 지방 분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

- 최근 非과밀억제권역 위주로 수도권의 인구가 증가\*하는 상황

- \* 최근 5년간('19년~'23년) 권역별 인구증감(천명):  
(과밀억제) △449 (△2%) (성장관리) +606 (+11%) (자연보전) +59 (+5%)

### ④ 내년에 이전하는 기업부터 적용되는 것인지?

☐ 개정규정은 '25.1.1. 이후 이전하는 기업부터 적용

☐ 다만, '24.12.31.까지 실질적으로 이전에 착수한 경우\*라면 종전 규정을 적용할 예정

- \* ①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조특법 §63①에 따라 이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 
②공장 이전을 위해 기존 공장의 부지나 공장용 건축물을 양도(양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함)하거나 공장을 철거 또는 폐쇄한 경우  
③공장 이전을 위해 신규 공장의 부지나 공장용 건축물을 매입한 경우 등

## [6] 중소기업 등 범위 합리화 (상세본 p.77)

### ① 개정 내용

#### ☐ 조특법상 중소·중견기업에서 부동산 임대업 법인 제외

\* 배제 업종: (현행) 소비성서비스업 → (추가) 부동산 임대업

#### ☐ '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'을 조특법상 중소기업에서 제외

\* (요건: ❶+❷+❸) ❶ 지배주주등 지분율 50% 초과, ❷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임대·이자·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% 이상, 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

### ② 개정 취지

#### ☐ 법인, 개인사업자 간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조세회피 방지

- (부동산 임대업 배제) 현재 개인 사업자의 부동산 임대업 소득은 사업소득에서 제외되어 과세특례 적용이 제한
- (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) 조특법상 개인의 부동산 임대소득과 이자·배당소득은 사업소득에서 제외되어 과세특례 적용이 제한

## [7]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지급액 인하

(상세본 p.79)

### ① 현행 제도

-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발급한 자를 신고시 건당 50만원, 인당 연간 200만원의 포상금 지급
  - 고소득 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를 통한 탈세 방지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'05년도 도입

###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

- (개정 내용) 신고포상금의 건당·연간 지급액 한도를 인하
  - 건당 50만원 → 25만원, 인당 연간 200만원 → 100만원
- (개정 취지) 현금영수증 제도 정착으로 정책효과는 감소함에 비해 영세사업자의 단순 착오로 인한 피해는 과도한 측면

<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 및 금액 >

	'19년	'20년	'21년	'22년	'23년
지급 건수	7,682	11,931	13,025	16,461	21,017
지급액 (백만원)	1,478	2,369	2,842	3,913	4,871

### 3. 세원투명성 제고

#### (1)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

(상세본 p.83)

##### ① 현행 제도

- 특정품목 거래 시 매입자가 금융회사의 전용거래계좌에 매입대금(부가세 포함)을 입금하면 금융회사가 부가가치세를 과세관청에 납부
  - 매출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후 납부하는 대신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여 부가가치세 탈루 차단
  - 현재 금, 철스크랩 등에 대해 매입자 납부특례 운용 중

#####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

- (개정 내용)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면세점 송객용역\* 추가  
→ 면세점이 송객용역 수수료를 여행사에 지급시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
  - \*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용역
- (개정 취지)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관광객 유치 대가로 송객수수료(부가가치세 포함) 수취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탈루·폐업하는 사례 방지



## [2] 관세 성실신고확인 및 월별 확정납세신고제도 신설

(상세본 p.85)

### ① 도입 취지

- 조사인력 등 한계로 제한된 수의 수입업체만을 대상으로 정기 관세조사를 통한 사후 세액검증 중
- 정확한 관세납부 관행 정착을 위해 '관세사'를 통한 월단위 성실신고확인 및 월별확정납세신고 제도 도입

### ② 제도 개요

-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월별로 관세사의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납세신고할 수 있는 제도 도입
- 수입신고 후 다음달 말일까지 월단위로 세액 납부 허용  
(납부기한 최대 45일 연장)

구 분	주 요 내 용
신고대상	■ 직전 2개년 평균 연간 수입액 3천만불 미만 업체 중 신청한 자 *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(AEO), 소규모성실사업자 제외
신고물품	■ 수입(납세)신고한 물품 * 과세가격결정 사전심사(ACVA) 물품,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물품 제외
신고내용	■ 성실신고확인서 및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확정신고 * 관세사등이 과세가격·품목분류 적정성, 납세신고 정확도 등 확인·작성
신고·납부기한	■ 수입(납세)신고분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
시행시기	■ '28.1.1.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

### ③ 성실신고확인을 의무제가 아닌 선택제로 하는 이유

- 관세사를 통한 성실신고 확인 여부에 대해 기업의 선택권 부여
  - 성실신고 부담(수수료 등)과 납부이연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을 비교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

### ④ '28.1.1.부터 시행하는 이유

- 전산시스템 구축\*, 고시·지침 등 하위법령 제개정, 수입업체·관세사 안내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'28년 시행

\* ('25~'27) 정보화 예산 반영 및 시스템 개발 → ('28) 시행

### [3]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강화

(상세본 p.88)

#### ①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

- (개정 내용)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20%의 원천징수세율\* 적용

\* 예납적 원천징수로서,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·납부 시 또는 출국시 정산

- (현 행) 계약기간 3년 이하 20%, 3년 초과 3% →  
(개정안)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외국인 직업운동가에게 20%

- (개정 취지)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인상하여 세원관리 강화

- 이를 위해 계약기간 3년 이하 외국인 선수에 대해서는 원천세율을 20%로 既상향(18년 개정)
- 실제 계약기간이 3년 이하임에도 3년 초과로 계약기간을 조정하여(예: 3년 1개월) 3% 원천징수세율 적용 후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할 필요

#### [4]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

(상세본 p.89)

##### ① 현행 제도

- 배우자·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(토지·건물 등)을 10년 이내 양도시 양도차익은 증여자의 취득가액 기준으로 계산\*

\* 양도차익 = 양도가액 - 증여한 배우자 등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

- 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사례 방지를 위함

##### ②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

- (개정 취지)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주식 등\*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\*\* 방지

\* 대주주 상장주식, 장외거래 상장주식, 비상장주식, 해외주식 (「소득세법」 §94①3호)

\*\* (예) 해외주식 1만주, 취득가액 1억원, 시가 3억원의 경우

(본인 양도시) 양도차익 2억원 → 양도소득세(기본공제 250만원, 20%) 3,950만원

(배우자 시가로 증여 후 양도시) 양도차익 0원

- (개정 내용) 양도일 전 1년 이내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등을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\*에 추가

\* (현행) 토지·건물, 부동산 취득 권리(아파트당첨권 등), 시설물 이용권(회원권 등)

##### ③ 주식 등의 이월과세는 양도일 전 1년으로 설정한 이유

- 부동산 대비 가격 변동성이 큰 점을 감안하여 1년으로 설정

- 과거 운영한 주식 장기보유 과세특례('98~'10년)의 장기보유 기준 기간\*이 1년 또는 3년이었던 점도 감안

\* ('98~'00년) 3년, ('01~'08년) 1년, ('09~'10년) 3년

## **[5] 거주자 판정기준 보완** (상세본 p.90)

### **①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**

#### ☐ **(개정 내용) 거주자 판정기준 구체화 및 거주자 범위 일부 확대**

※ 거주자/비거주자 과세범위: (거주자) 국내외 원천의 모든 소득, (비거주자) 국내 원천소득

#### **①** 거주자 범위를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서 전년도부터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까지 확대

\* (현행) 1과세기간 183일 → (개정안) ①1과세기간 183일 또는 ②계속하여 183일

#### **②** 국내에 거소를 둔 것으로 보는 일시적 출국 사유 구체화

\* (현행) 관광·질병치료 등 일시적 사유로만 규정(소득령)  
(개정안) 친지방문, 출장·연수 등 직업·사업 관련 사유 추가하여 구체화(소득칙)

#### **③** 거주자↔비거주자 전환 시 과세기간 명확화

#### ☐ **(개정 취지) 거주자 판정기준 명확화**

### **② 183일 기준 변경 관련 사례**

#### ☐ **(사례1)** '26.8.10.부터 국내에 계속하여 거소를 둔 경우

- **(현행)** '27.1.1.부터 183일이 되는 '27.7.2.부터 거주자
- **(개정)** '26.8.10.부터 183일이 되는 '27.2.8.부터 거주자

#### ☐ **(사례2)** '26.8.10. ~ '27.6.30. 국내에 거소를 둔 경우

- **(현행)** '26년, '27년 모두 비거주자\*

\* '26년 144일, '27년 181일로 183일 기준에 미달

- **(개정)** '27.2.8. ~ '27.6.30. 거주자

## [6]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이행근거 마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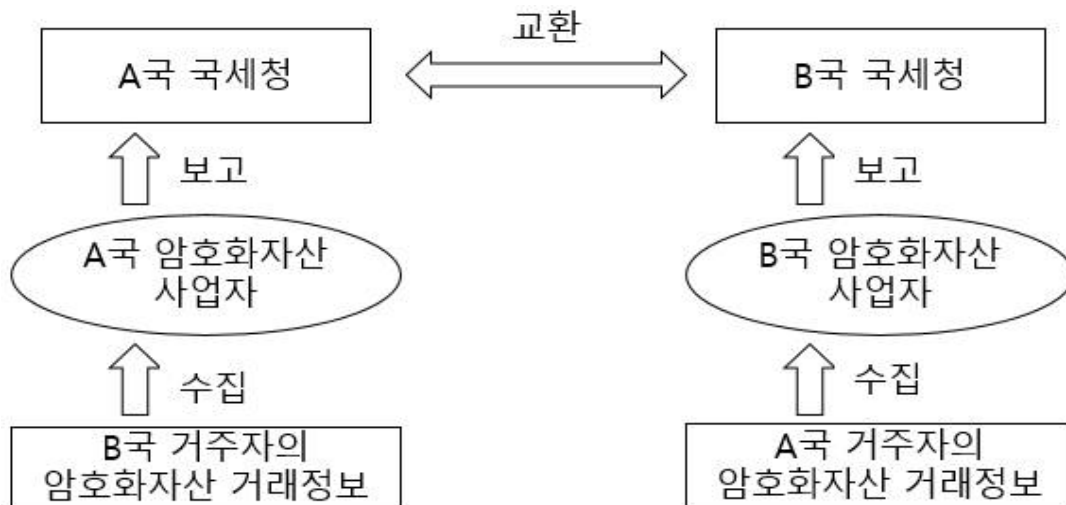
(상세본 p.94)

### ①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(CARF) 개요

- 암호화자산사업자가 비거주자의 암호화자산\*에 대한 거래정보를 국세청에 보고 후, 국세청이 관련 국가와 매년 교환하는 체계

\* 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상 가상자산 + 토큰형 증권

#### < 국가 간 자동 정보교환방식 >



### ② 교환대상 정보

- 교환대상 정보는 주로 비거주자·외국법인의 암호화자산정보\*

\* 사용자의 이름, 주소, 거주관할권, 납세자번호 및 사용자의 암호화자산 거래내역 (암호화자산의 이름, 거래 유형, 거래의 총 지급·수취 금액, 총거래량, 거래 횟수) 등

- 거주자·내국법인은 이중거주자인 경우\* 교환대상에 포함

\* 예) 우리나라법에 의하면 우리나라 거주자이나 미국법에 의하면 미국 거주자인 경우

## [7]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 범위 확대

(상세본 p.98)

### ①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도 개요

- 납세의무자(법인) 재산의 강제징수로도 납부하여야 할 국세 등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무한책임사원, 과점주주\* 등이 부족액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행의무

\* 과점주주의 요건

: (국세기본법 §39) 주주 또는 사원 1명과 그 특수관계인이 ①지분을 합계 50% 초과 ②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로, 해당 사원은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, 유한책임회사 사원, 유한회사 사원으로 한정

###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

- (개정 내용) 2차 납세의무가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에 영농·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(과점조합원) 추가\*

\* 과점주주와 동일한 요건 적용

- (개정 취지) 영농·영어조합법인이 법인세,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과점조합원의 과세회피를 방지할 필요

## IV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

### 1. 납세자 편의 제고

#### (1)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 (상세본 p.101)

##### ①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

- **(개정 내용)** 직전 사업연도에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법인은 전자적 방법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개정
  -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부금을 받은 날의 다음연도 1.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
- **(개정 취지)**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연계하여 기부자 편의를 증진하고 기부 문화 확산을 뒷받침

##### ②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의 구체적인 기준은?

-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은 직전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공익법인 등을 대상으로 할 계획
  - 다만, 구체적인 기준은 법인별 '23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규모,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현황 등을 감안하여 결정



## [2] 해외직구 통관제도 개선

(상세본 p.102)

### ①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

- (개정 취지) 해외직구 물품이 급증<sup>\*</sup>함에 따라 통관 및 위험물품 관리 효율화 등 제도개선 필요

\* 전자상거래물품 반입 건수(만건) : ('21) 8,838 → ('22) 9,612 → ('23) 13,144

-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 전 제출한 거래정보를 통관 및 위험물품 관리에 활용

- (개정 내용) 해외직구 물품 수입 전 거래정보 확보를 통해 통관 효율화('26년 시행)

- ① (전자상거래업체 등록) 선별검사 등 간소한 통관절차를 적용받고자 하는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<sup>\*</sup>는 관세청에 등록 선택 가능

\* 국내외 통신판매업자, 통신판매중개업자, 배송대행업자

- ② (거래정보 제공) 관세청장의 요청을 받은 등록업체는 판매물품 거래정보<sup>\*</sup>를 물품 수입 전까지 제공

\* 주문번호, 구매일자, 물품명, 물품가격, 플랫폼, 수신인 등

- ③ (통관효율화) 관세청은 제공받은 거래정보 등을 활용하여 간소한 수출입신고 및 선별 검사 등 적용

\* (현 행) 모든 전자상거래물품(택송품) X-ray 검사  
(개정안) 고위험물품 집중 검사 등 선별검사 가능

### ② '26년부터 시행하는 이유

- 관세청의 제도 이행 준비,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안내 기간 등을 고려하여 '26년부터 시행

### [3] 국외투자기구의 국채등 비과세 원천징수 절차 간소화 (상세본 p.105)

#### ① 현행 제도

- 비거주자·외국법인이 우리나라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투자시 지급받는 이자·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\*('23년 시행)

\* 우리나라 국채등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 국채·외환시장 안정화에 기여

- 비거주자·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국채등에 투자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 투자자별로 비과세 신청서 및 해당 국가의 거주자증명서 등을 제출할 필요

####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

- (개정 내용)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국채등에 투자하는 경우 실질귀속자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

- ① 국외투자기구를 국채등 이자·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간주하여 하위 투자자 확인 절차 없이 바로 비과세 적용
- ② 국외투자기구의 하위투자자 중 거주자·내국법인이 있을 경우 원천징수하지 않고 거주자·내국법인이 직접 신고·납부하도록 함

- (개정 취지) 국외투자기구를 통한 경우 하위 투자자 정보를 일일이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는 업계의 지속된 애로를 반영

⇒ 우리나라 국채등에 투자하는 투자자 편의를 제고하여 투자 수요를 확대하고, 세계국채지수(WGBI) 편입을 지원

#### [4] 미수령 환급금 총당기준 상향

(상세본 p.107)

##### ① 현행 제도

- 국세환급금\* 중 ①체납 국세 등에 총당 후 잔액이 10만원 이하이고, 지급결정일부터 ②1년간 미수령한 경우 고지분 국세에 자동으로 총당

\* 납세자가 국세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 납부하여 과세관청이 환급해주는 금액

- 국세환급금은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동의가 있어야 국세에 총당할 수 있으나, 해당 요건 충족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

#####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

- (개정 내용) 환급금 자동 총당의 요건 중 금액요건을 상향

- 총당 후 잔액 10만원 이하 → 20만원 이하

- (개정 취지) 납세자가 환급금 수령을 적기에 하지 않아 미수령 환급금이 소멸시효(5년) 만료로 국고에 귀속되는 것을 방지

\* 체납 국세 등에 총당한 후 잔액이 20만원인 경우 개정 효과  
(현 행) 5년간 미수령시 소멸시효 만료로 전액 국고에 귀속  
(개정안) 1년간 미수령한 경우 환급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납부고지에 따라 납부할 세액에 자동으로 총당 가능

## 2. 납세자 권익 보호

### (1)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제도 합리화 (상세본 p.111)

#### ① 현행 제도

- 거주자·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
  - (신고 대상)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계좌잔액합계가 5억원 초과
  - (신고 기한) 신고대상 연도의 다음해 6.1~6.30.

####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

- (개정 내용)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추가\* 및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수준 완화\*\*

\* ①소송·상호합의 등 결과로 조세조약에 따라 계약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거주자  
②과세당국에 제출된 해외신탁명세서로 해외금융계좌가 확인된 거주자·내국법인

\*\* <과소·미신고>(현행) 위반금액 10~20%, 20억원 限 → (개정안) 위반금액 10%, 10억원 限  
<거짓·미소명>(현행) 위반금액 20% → (개정안) 위반금액 10%

- (개정 취지)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부담 완화

- (비거주자) 소송·상호합의 등의 결과 조세조약에 따른 계약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자(비거주자)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불필요
- (해외신탁명세서 제출자) 해외신탁명세서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중 정보제공은 불필요
- (과태료) 현행 과태료는 의무 위반에 따른 국조법상 다른 과태료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\*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인하 추진

\* 높은 과태료 금액 외에도, 다른 과태료와 달리 해외금융계좌 과태료는 누진을 적용

## [2] 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연장 등 특례 적용대상 확대

(상세본 p.116)

### ① 현행 제도

- 납세자가 재난·중상해 등으로 국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·납부고지 유예 가능

\*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 시 가능(국징법 §13, §14)

- (원칙) 9개월까지 연장·유예 가능
- (특례)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·유예
  - ①고용재난지역 등에 사업장을 가진 자가 ②소득세·법인세·부가가치세 및 해당 부가 세목에 대해 ③신청 시 적용

###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

- (개정 내용)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 내 소재하지 않더라도, 해당 지역에서 재난 등으로 부상당한 자도 특례 대상에 추가
- (개정 취지) 특별재난지역에서 부상을 당한 타 지역 사업자도 동일하게 정상적인 사업영위가 어려우나 현행법상 특례 적용 불가
  - 대형 재난 등의 피해자에 대하여 사업장 위치와 상관없이 특례를 적용하여 사업 정상화 지원

**(1) 연금계좌 추가납입 대상 확대**

(상세본 p.140)

**① 연금계좌 세액공제 개요**

☐ **현행 연금계좌**(연금저축계좌+퇴직연금계좌) **세액공제 제도**

- **(납입한도)** 1,800만원 + ISA계좌 만기시 전환금액 + 연금주택 양도 주택차액(누적한도 1억원)
- **(세액공제 납입한도 및 세액공제율)**

총급여액 (종합소득금액)	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(퇴직연금 합산시 한도)	세액 공제율
5,500만원 이하 (4,500만원)	600만원 (900만원)	15%
5,500만원 초과 (4,500만원)		12%

\* 만기 ISA전환금 세액공제한도 추가 : MIN(전환금액×10%, 3백만원)

**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**

☐ **(개정 내용)** 현행 연금계좌의 납입한도에 기초연금수급자 부동산 양도차액의 추가납입 허용

- **(대상자\*)** 부부합산 1주택 이하자 & 기초연금수급자

\* 부동산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

- **(대상부동산)** 10년 이상 보유 주택, 건물, 토지
- **(납입액)** '양도가액 - 취득가액' 중 최대 1억원(생애누적)
- **(납입기간)** 부동산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입
- **(적용시기)** 영 시행일 이후 부동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
☐ **(개정 취지)** 고령화 대응을 위해 부동산 연금화 지원

## [2]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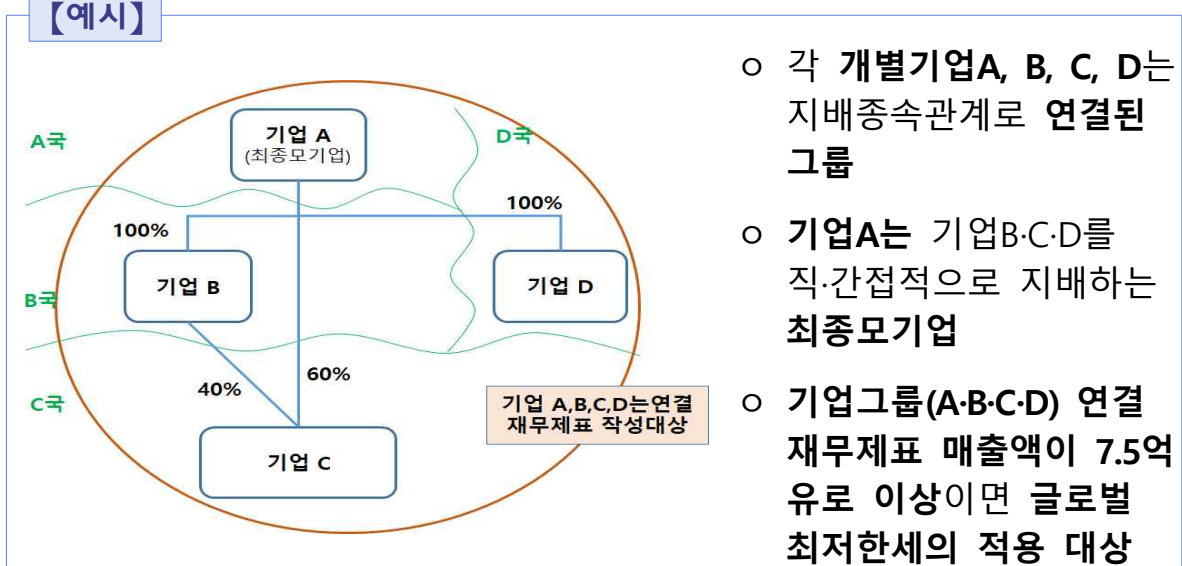
(상세본 p.151)

### ① 글로벌최저한세 개요

◇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(15%)보다 낮은 세율 적용 시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 부여

□ (대상) 연결매출액 7.5억 유로(약 1조원) 이상 다국적기업그룹

#### 【예시】



□ (납세액) 국가별 실효세율(=조정대상조세/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)을 기준으로 최저한세율(15%)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세액 부과

$$\text{추가세액} = (15\% - \text{국가별 실효세율}) \times (\text{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} - \text{실질기반제외소득}^*)$$

\* 실질 사업활동 지표(유형자산 및 급여)에 고정율(5%)을 적용하여 공제

□ (추가세액 납부) 소득산입규칙에 따르는 경우 최종모기업이 모든 저율과세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우선적으로 부담

\* (예) 기업 C에서 추가세액 10이 발생한 경우 → 기업 A가 A국에 10을 납부

## ② 국가별 실효세율·추가세액 계산방식 및 적용 예시

### □ 국가별 실효세율·추가세액 계산방식

- ① 국가별로 구성기업들의 조정대상조세 합계를 글로벌최저한세 소득·결손의 합계(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)로 나누어 실효세율 계산

$$\blacksquare \text{ 실효세율} = (\text{조정대상조세 합계}) \div (\text{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})$$

- ②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(15%)에 미달(저율과세 국가)하는 경우, 미달하는 세율에 초과이익을 곱하여 추가세액 계산

$$\blacksquare \text{ 추가세액} = (15\% - \text{실효세율}) \times \text{초과이익}(\text{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} - \text{실질기반제외소득}^*)$$

\* 실질 사업활동 지표(유형자산 및 급여)에 고정율(5%)을 적용하여 공제

### 【적용 예시】

- A국에 소재한 A기업은 최종모기업으로, B국에 소재한 자회사 B1과 B2를 소유하고 있고, 각 기업의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음

	A기업	B1기업	B2기업
① 법인세비용	200	50	45
② 조정사항(자본에 계상된 조세 등)	50	5	-
③ 조정대상조세(①+②)	250	55	45
④ 당기순이익	800	450	255
⑤ 조정사항(조세비용 등)	200	50	45
⑥ 글로벌최저한세소득(④+⑤)	1,000	500	300

- A기업의 자회사들이 소재하는 B국의 실효세율은 12.5%( $= (55+45) \div (500+300)$ ), 추가세액은 20( $= (\text{최저한세율} 15\% - 12.5\%) \times (500+300)$ 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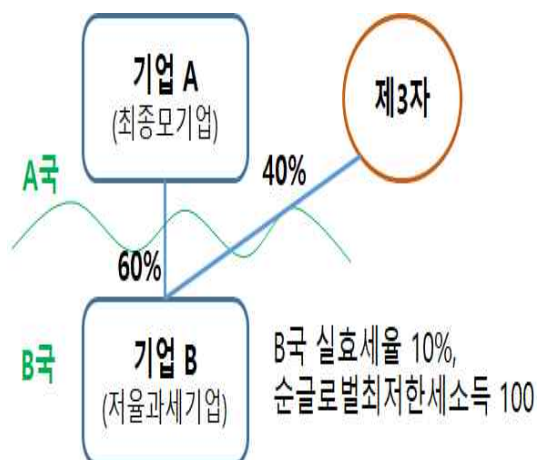
### ③ 소득산입규칙 적용 예시

□ **(최종모기업)** 최종모기업(Ultimate Parent Entity)은 모든 저율과세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우선적으로 부담

○ 모기업은 저율과세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중 **소득산입비율\***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

$$* \text{ 소득산입비율} = 1 - \frac{\text{모기업 외의 다른 소유자가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저율과세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}}{\text{저율과세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}}$$

#### 【예시】



① 기업B 추가세액 =  $(15\% - 10\%) \times 100 = 5$

② 기업A의 기업B에 대한 소득산입비율 =  $(100 - 40) \div 100 = 60\%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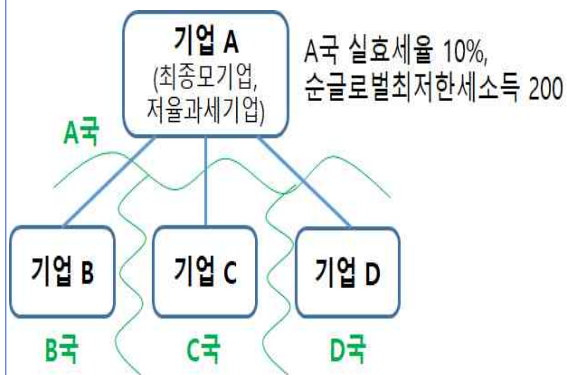
∴ 기업A는  $5 \times 60\% = 3$ 만큼 A국 과세당국에 납부

#### ④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 예시

□ 최종모기업이 저율과세되거나 모기업 소재국이 소득산입규칙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 적용

- 저율과세 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을 소득산입보완규칙을 도입한 국가에 납부
-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은 각 국가의 종업원 수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국가로 배분

##### 【예시】



	B국	C국	D국	합계
종업원 수	70	20	10	100
유형자산	30	40	30	100

① 기업A 추가세액 =  $(15\% - 10\%) \times 200 = 10$

② A국은 글로벌최저한세제도 미도입, B~D국은 도입

③ 배분비율

▶ B국 =  $50\% \times 0.7 + 50\% \times 0.3 = 50\%$

▶ C국 =  $50\% \times 0.2 + 50\% \times 0.4 = 30\%$

▶ D국 =  $50\% \times 0.1 + 50\% \times 0.3 = 20\%$

∴ 기업B는 5, 기업C는 3, 기업D는 2를 각각 B국, C국, D국 과세당국에 납부

## ⑤ 신고기한 특례 규정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

- **(개정 내용)** 사업연도 종료일에 따라 '26.6.30일 전에 신고의무가 도래하더라도 '26.6.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함
  - **(개정 취지)** 신고기한은 최초적용연도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8개월, 그 후 연도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5개월로 규정
    - 사업연도가 12개월인 경우 신고기한은 '26.6.30일이나,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 '26.6.30일 전에 신고의무 도래 가능
- ⇒ 기업의 이행부담을 감안하여 '26.6.30일 전에 신고의무가 도래하지 않도록 특례 마련

### 【'26.6.30일 전 신고의무 발생 예시(OECD)】

- '24년 사업연도가 11개월인 경우('24.1.1.~'24.11.30.)
  - '24.1.1일 시작하는 최초적용연도의 사업연도종료일이 '24.11.30일로 이로부터 18개월 후인 '26.5.31일이 신고기한
- '24년 사업연도는 12개월이었으나, '25년에 사업연도를 2개월로 변경한 경우('25.1.1.~'25.2.28.)
  - '25.1.1일 시작하는 사업연도종료일이 '25.2.28일로 이로부터 15개월 후인 '26.5.31일이 신고기한